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	배포일시	2019. 5. 28.(화) 11:00
IOM이민정책연구원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IOM·OIM / IOM·MRTC)		담당부서	연 구 교 육 실
		연 락 처	사업지원팀장 박성일 031)920-5626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이민정책포럼」 개최

□ 2019. 5. 24.(금) 13:00~18:3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체류 외국인 240만명 시대,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 방향 모색' [부제 : 반(反)외국인 정서, 그 원인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이민정책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 이번 포럼은 제12주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법무부,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및 이민 관련 3개 학회(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하였고, IOM이민정책연구원(원장 정기선)이 주관하였으며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종사자, 일반 국민,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축사에서 **"외국인의 증가는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창의와 혁신에 도움을 주는 반면, 문화적 갈등과 사회통합 비용 증가 등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중장기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민현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명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금일 포럼을 통해 반외국인 정서의 원인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세계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내에서 다문화사회가 제대로 정착하고 내국인과 체류외국인 간의 정서적 교감까지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양한 대책이 개진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였습니다.

□ 정성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분산되어 있는 이민 · 외국인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불필요한 중복사업이나 예산낭비를 개선하고 이민정책의 목표를 재정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포럼은, 주제별로 **①反외국인 정서 실태와 원인, ②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 ③선진적 이민정책 추진방향 모색**의 3개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제1세션 주제인 ‘反외국인 정서 실태와 원인’에 대해 발표자인 경북대 육주원 교수는 온라인 · 오프라인상의 다문화-반다문화 담론의 전개 과정을 소개하고, “反다문화가 곧 인종주의라는 등식은 다문화-반다문화 담론의 실체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전북대 김철효 강사는 외국인혐오에 대한 우려가 다소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인혐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이라는 국가정책이 제대로 수립 · 추진됨으로써 그 사회적 여파가 부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1세션의 토론자로 나선 이창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문화정책이 반다문화 정서의 한 가지 원인이 되기도 하고, 무분별한 다문화 용어의 사용은 국민들에게 다문화 피로감을

유발함과 동시에 '차이'를 드러내고 '구별짓는' 용어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우리 사회의 외국인 혐오는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확대·재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 제2세션 주제인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에 대해 김환학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민현상을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사회통합을 대전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 헌장에 가까운 수권규범에 불과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해체하여 실천적 규범성을 갖춘 '사회통합기본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이민문제를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비해 차원과 규모를 달리하는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므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국민전체의 관점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노호창 호서대 교수는 '고용부담금의 법적 쟁점'이라는 발표를 통해 내국인 우선고용원칙과 사회통합이라는 정책적 요구의 조화를 위해 사회통합기금의 재원으로서 고용부담금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입장, 외국인 취업자의 입장, 국가 입장 등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 2세션의 토론자로 나선 이병하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이민정책과 이민법제는 날로 복합성이 가중되는 국제이주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용허가제 등을 넘어서서 여타 이민정책 이슈와의 연계성이 고려된 노동이주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부득이 외국인 고용을 진행하게 된 사업주에게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제3세션 주제인 ‘선진적 이민정책 추진방향 모색’에 대해 발표자인 오정은 한성대 교수는 “반외국인정서를 극복하고 국민의 공감대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칭)이민·통합기금 설치’를 통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 구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민난민심판원 설립” 등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3세션의 토론자로 나선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민자 지원에 정부재원을 사용하는데 대한 국민적 반감을 완화하고 이민자 지원과 관련한 다수부처 간 예산 중복 등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이민통합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현재 미국 등 상당수 선진국들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민자들이 내는 각종 수수료를 사회통합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1~3세션 발표 및 토론이 끝난 이후 법무부, 언론인, 3대 학회장의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법무부 차용호 외국인정책과장은 외국인정책은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고, 같은 맥락에서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 이유와 관련, “동포가 아닌 일반 외국인이 귀화로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여러 이유로 다시 외국인으로 된 경우 그 일반외국인이 동포비자(F-4)를 부여받는 것은 원래

재외동포법의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출생에 의해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경우로 수정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과도 지원은 국민의 역차별 의식과 반감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제대로 된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어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철효 전북대 강사가 언급한 한국의 이민정책은 국민들이 기피하는 가정에 출산력과 돌봄 노동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견에 대해 "한국은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처럼 외국인돌봄제도를 아직 본격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돌봄제도는 이제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로 볼 수 없어 공적 관리의 대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